

安-金 단일화로 선거 후 보수재편 노리나

〈철수〉 〈문수〉

1차 회동 이전 확인한 채 결렬

오늘 데드라인...막판 합의 가능성 바른미래 호남의원들 '부글'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와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단일화 문제가 6·13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재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지켜보는 바른미래당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가시화되고 있어 지방선거 이후 바른미래당의 분화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안철수-김문수 후보는 지난 3일 저녁 1시간여 동안 '비밀회동'을 하며 단일화 의사를 타진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이후의) 당 대 당 통합'과 여론조사 단일화를 주장하고, 안 후보는 '김 후보의 양보'를 주장해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김 후보 측은 5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정치적인 예의와 시·구의원 문제 등의 현실적 문제로 협상이 결렬됐다"며 "단일화는 절대 없다"고 밝혔다. 안 후보도 이날 여의도역에서 출근길 선거운동을 하며 기자들에게 김 후보를 다시 만날 계획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두 후보와 박원순 후보의 지지를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단일화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의 극적 타협 시나리오가 지속해서 거론되는 이유다. 오는 8~9일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7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일화 데드라인은 사실상 6일로 좁혀진다. 정치권에서는 단일화 방식 등에 대해 협상을 통해 6일쯤 김-안 후보가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않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단일화 이뤄진다면 단순히 지방선거 연대를 뛰어넘어 지방선거 이후 '보수



바른미래당 손학규 선거대책위원장이 5일 서울시장 앞에서 열린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기자회견에서 안 후보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재편'으로 이어지지 않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당장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야권 대통합을 전제로 서울시장 단일화를 제안했다. 홍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서울시민과 야권에서는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며 "안철수 후보가 대승적 결단으로 양보 해주면 지방선거 후 양당이 대동단결해 문 정권의 폭주를 막고 야권 대통합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측에서도 손학규 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지방선거 이후의 야권 재편 구도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후보와의 단일화 및 통합 가능성에 대해 바른미래당 광주·전남 의원들은 부글부글 끓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소속 유일한 전남 의원인 주승용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런 자유한국당 후보와의 단일화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며 "정체성이 우선 다름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은 지금 적폐정산의 대상이다.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될 정당"이라고 규정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표도 최근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의 연대 여부에 대해 "우리당은 '자유한국당과 연합이나, 연대나, 후보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한국당은 국정농단 내지 권력남용과 부정부패에 책임있는 당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심판과 극복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단일화 여부를 떠나 지

방선거 이후 보수 재편과 맞물려 바른미래당의 분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호남 지역 의원들이 대거 바른미래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이동, 민주평화당과의 재결합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선거 유세에서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김동철, 권은희, 주승용, 김광영, 최도자 의원들은 이미 두번 속았다. 세번 속지 말고 평화당으로 돌아오라"며 "이분들이 돌아오면 평화당은 완전 무결하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김대중의 정신과 호남의 가치를 위한 평화당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6·13 선거현장

전남지사·시장·군수 후보

김영록 "전남형 기본소득제도 도입"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미취업 청년과 저소득 농어민 등이 적정수준의 생활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전남형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올 9월부터 아동수당을 도입해 만 0세에서 6세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노인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각각 월 25만씩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취업 청년들과 저소득 농어민 등 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장 제도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후보는 "정년과 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소득지원수당을 포괄하는 통합적 '전남형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권오봉 "허위사실 유포 권세도 후보 고발"



권오봉 무소속 여수시장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권세도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권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세도 후보가 보도자료와 SNS를 통해 권오봉 후보가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장시절 직원들과 함께 외유성 출장을 떠나는 등 부실행정을 한 것처럼 교묘하게 날조하고 광범위하게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 측은 "권세도 후보가 모든 토론회에 불참하면서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 명백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SNS 계정에 거짓이 올려 유권자를 기만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길운 "서울-해남 농수산물 공급 추진"



이길운 더불어민주당 해남군수 후보는 "해남군이 전남의 농수산 핵심지역이 되도록 해남 농수산물 신경제지도를 만들겠다"고 5일 밝혔다.

이 후보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안정제도가 도입이 되도록 농가수당을 지원하고 지역화폐를 발행해 지역자금의 역의 유출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농수축산물과 임업의 친환경 생산 확대, 가공·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서울 공공급식에 해남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업무협약 체결 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 창업·창업 농가·창업 어가의 실질적인 지원체계 구축, 애벌레·곤충·광산야·반려식물 등 신성장 산업 집중 육성 등도 제시했다.

최경환 "민주 자라탕 사건 관련자 조사해야"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5일 '더불어민주당 자라탕 사건' 관련해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즉각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관련자 전원을 소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남 화순의 '자라탕 사건'에 대해 공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이미 선관위에서 자라탕 파티 참석자들의 진술을 확보했고 참석자들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어 호화 자라탕 파티의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선관위를 향해서도 "자라탕 파티를 벌였던 현장에 CCTV가 4대나 설치됐다는 것이 확인됐다. 선관위는 CCTV부터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즉각적인 검찰 고발을 촉구했다.

민주 광주 구청장 후보 금품수수 의혹

사업가 "청탁 대가로 1800만원 전달"…후보측 "사실 무근"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한 구청장 후보가 광주시 공무원 인사 및 시 산하기관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사업가 조모(50)씨가 "광주과학기술진흥원장을 지낸 민주당 A구청장 후보에게 공무원 인사 청탁과 사업 참여 청탁 대가로 1800만원을 전달했다"면서 자수했다. 조씨는 "지난 2015년 가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한 커피숍에서 '광주시 공무원 정보씨를 사무원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A구청장 후보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해 동구

장동의 한 환경업체 사무실 등지에서 '광주시 환경관리공단 하수 슬러지 정화 사업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며 2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A후보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A후보는 반박자료를 통해 "공무원 인사청탁이나 금품 제공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 환경관련 사업과 관련한 로비자금 수수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이 환경업체) 고문 자격으로 4개월 가량 같이 일한 파트너 관계이며, 근무하면서 환경관리공단에 신기술 적용 시험을 진행했고, 급여 및 경비 등의 명목으로 조씨를 통해 8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해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노동계 고강도 대정부 투쟁 예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고강도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정부는 5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반겼지만, 노동계는 복리후생 수당까지 산입범위에 들어갔다며 강하게 반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관 부처가 국회의 재의를 요구하는 의견을 법제처에 제시하고 이를 안건으로 만들어 국무회의에 상정하는데,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재의 요구 의견이 없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의결 직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국무회의는 문재인 정권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악법 중의 악법을 의결했다"며 "최저임금 강탈법"은 정권을 향하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연합뉴스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대통령령 제28838호 농업진흥구역 (2018년 5월 1일 시행 대폭 완화)

- 농림축산식품부
- 에너지관리공단
- 농협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가능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연평균 6,000만원)

▶ 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3,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